

세계시민교육

강의일자	2021 년 5 월 10 일	강의시간	19 : 00 ~ 21 : 00
강의대상 (학교/기관명)	서영여자고등학교	강사성명	오세진
학습 목표	1.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는 상호의존성을 이해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세계시민의 개념을 학습한다. 3. 세계 속 KOREA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본다. 4. 세계시민이자 한민족으로서 달성해야 할 평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 강 주 요 내 용	<p>(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세계화, 지구촌 이야기) 세계여행, SNS, TV프로그램, 세계음식 등을 통해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학습함.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이로운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겪고 있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p> <p>(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소개한다. 빈곤, 난민, 기후변화, 코로나와 같은 개별국가단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 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함양한다.</p> <p>(세계 속 KOREA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우수한 제품,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문화(드라마 · K-POP · 한복 · 한식),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의 도약, 분단의 아픔과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평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가 훗날 평화와 화해의 아이콘이 될 희망을 떠올려본다.</p> <p>(세계시민이자 한민족으로서 달성해야 할 평화) 유라시아 대륙 아래로는 아시안하이웨이 1번도로(Asian Highway 1)로, 위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어져 있는 대륙을 다시 본다. 분단상황을 끝마치고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아 연결된 세상 곳곳을 자유로이 누비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리하여 철도로 하나된 세상을 두바퀴로 가는 미래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본다.</p>		

- 오늘날 지구 공동체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전쟁과 폭력,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에너지 위기 등,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함.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간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함. 즉, 지속가능발전이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함.
- 2000년 UN에서 선언한 새천년발전목표(MDGs)의 기한이 종료되자, UN은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새천년발전목표의 후속사업인 포스트 2015 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여 발표하였음. SDGs는 UN 회원국들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각종 의제와 정책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표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GCED)은 SDGs의 세부목표 4. 7에 포함됨.

※ 세계시민의 정의

- 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로 인식
- ②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
- ③ 세계화 시대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 ④ 빈곤, 불평등, 분쟁, 환경오염 등 지구이슈에 대한 이해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
- 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적, 능동적 태도
- ⑥ 개인의 참여 뿐 아니라 상호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 실천
- ⑦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데 기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목표 3	건강한 삶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강화
목표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증진,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목표 9	회복(복원)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목표 10	국내적 또는 국가간 불평등 경감
목표 11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
목표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1. 한반도 문제와 평화적 관점

○ 분단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근본원인

- 호주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가 발표한 ‘세계평화지수 2020(Global Peace Index 2020)’에 의하면 세계 163개국 중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48위, 북한은 151위
- 다른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에 ‘진영논리’가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그 소통이 대부분 ‘색깔논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분단은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
- 즉 사회적 갈등의 수면 밑에는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작동하고 있음

→ 분단으로 인한 상호적대감, 마음의 경계가 문화적 폭력으로 왜곡되어 각종 폭력을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평화적 관점에서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지속가능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본전제

- 첫째, 북한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북을 공정하게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함. 북한에 관해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져야 함
- 둘째, 북의 사람들을 자유의지와 선택능력이 있는 행위자로 인정해야 함. 남북한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동등한 행위자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해야 평화의 동반자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음
- 셋째,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한 갈등 조정, 협력과 연대, 평화감수성, 여러 공동체와의 공존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점

※ 한반도 평화체제란?

- 국가들 간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으로 초래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며, 상호간에 공전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을 해나가도록 국가들 간에 합의하는 절차,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그것을 관할하는 기구 등을 의미
-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기반위에 평화공존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규범과 제도 등의 총합체
-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국민 모두에 대한 평화적 가치와 인식 공유

-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북미국교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국가 간의 정치적 해결이나 군비축소와 같은 군사적 신뢰의 제도에 국한되었으며, 평화체제 역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규정되었음
-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적인 조건은 법률,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이며, 실질적 차원에서는 남북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북미 간 적대 관계 해소 및 관계 정상화
- 이러한 노력은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여 결국 궁극적인 적극적 평화체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
- 평화체제는 중단기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심화시켜가는 장기목표

○ 평화의 사전적 의미

- 상호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소극적 평화)
- 즉 폭력의 부재, 전쟁의 부재
- 그러나 단순히 폭력·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전쟁 외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종전에 평화와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회의 모든 문제(장애, 빈곤, 기아, 환경, 기후변화 등)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표] 평화의 두 유형

소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의 부재(전쟁의 반대 개념)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로 사회의 정의가 달성되는 상태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등이 없는 사회에서 가능

○ 평화권

- 평화적 생존권으로 평화롭게 살 인간의 권리. 이는 평화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
- 평화를 인권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념에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 인식할 것과 제3세계 인권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 UN 총회에서 1978년 최초로 평화권 관련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고, 이후 아프리카연맹에서 1981년 아프리카 인권헌장이 채택

※ ‘인민과 인간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아프리카 인권헌장)

- 제23조 1. 모든 사람들은 국내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확인되고 아프리카단절기구 헌장에 의하여 재확인된 연대와 우호관계의 원칙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 2. 평화, 연대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다음을 보장한다:
 - a) 이 헌장 제 12조에 의하여 비호권을 향유하고 있는 개인은 출신국이나 헌장의 다른 당사국에 대한 파괴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b) 자국의 영토가 이 헌장의 다른 당사국의 인민들에 대한 파괴나 테러활동의 기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채택일 1981.6.27./발효일 1986.10.21./당사국 수 53)

- 198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평화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을 채택

◆ 한반도 평화권의 의미

- 평화권은 한반도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 즉 분단이 인권, 민주주의를 유보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
 - : 그동안 남북 분단체제와 이로 인한 대립은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
- ex) 국가보안법 등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부당한 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루어진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하고 있음
- 평화권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의 총체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개념

□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한반도정책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평화 공존’,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평화 공존’은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최대의 안보위협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 동시에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
- ‘공동번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이기적인 접근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가치를 발견, 동의, 실천함으로써 함께 잘 살아가는 한반도를 의미함
-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은 분단이후 현재까지 냉전시기의 잔재와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복합적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남북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환경, 국제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동북아의 평화공존은 남북한과 이웃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제협력을 통해 각 국가들간 새로운 지역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임. 즉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조성된 평화는 경제협력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지향하는 것임

1) 첫 번째 비전 : 평화 공존

- 대북정책의 첫 번째 비전은 평화
: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의 구조적인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남북관계 재개의 동력이 확보되고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 * 코르비재단 초청연설(2017.7.6.) 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 남북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평화. 평화 그 자체만으로 추구해야할 가치이고 최고의 국익,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이며 통일로 가는 문
- 즉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북미수교, 북일수교 등을 포함)

2) 두 번째 비전 : 공동 번영

- 대북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공동 번영
- ‘함께 잘 사는 한반도’ 즉 한반도 남북 모두의 공동 번영

- : 이를 위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번영이란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 번영의 영역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까지로 확장하여,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감. 즉 평화가 경제협력을 추동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평화경제론’)
 - 이러한 선순환적 구상은 한반도의 영역을 넘어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갈 것
 - ‘번영의 한반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 제안
- : 남북이 공존하고 공영하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3) 한반도정책의 3대 목표

- 1.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 2.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임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가능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를 위해 강력한 안보를 통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비핵화는 북한이 논의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북핵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단계적이면서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1953년 휴전과 함께 정전협정을 맺은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함. 평화협정은 평화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보장된 협정이 될 것이며 남북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임.

<2>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수십년의 시간동안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 그러나 남북관계는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만큼 국민들의 하나된 협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 이에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통일정책 등에 대한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 통일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국민들간의 토론을 확대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야 함. 이러한 합의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만들어 낸다면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현실화
 - : 지역적으로 한반도는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이 있고, 아세안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위치에 있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남북간 평화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서쪽으로는 중국과 연결되는 산업, 물류벨트를 동해 쪽으로는 러시아와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벨트를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환경, 관광, 생태벨트의 3대 경제벨트를 현실화하게 됨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은 북방 및 남방의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 이에 국가들마다 구상중이거나 추진중인 발전전략이 있다면 상호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

-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이다.
-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통일은 국민적 합의하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미

-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일상적인 삶을 향유하는 것
-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각자의 삶과 꿈을 보장한다는 의미
- 남북의 모든 주민들이 한반도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중시하고 남북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
- 통일은 단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기반 구축

-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대북정책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됨
-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상호 이익 도모
- 남북평화공존 및 공동의 번영을 위한 화해 협력을 지향
- 남북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통일의 기초 형성
-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

□ 법령 보완 및 당국 간 협의체제 구축

- 방북자들에 대한 포괄적 신변안전보장 문제, 민·형사 사건 발생시를 대비한 당국협의 및 제도화
- 냉전 시기의 법 규정 보완 및 저작권 보호 등 사안별 협의체제 구축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 및 민간분야 지원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고 교류·협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NGO활동과의 협조체제 구축

□ 경협사업 등과의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 확대

- 경협사업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적 교류 및 문화, 체육교류 병행
- 경협사업과 연계하여 경제, 과학, 기술분야 분야 교류 지원

□ 대내적 기반으로서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 냉전 구조 및 냉전문화의 청산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확대
- 보수, 진보간의 대화 확대로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구조’ 구현